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

네덜란드, 부모 9주 유급 육아휴직 시행¹⁾

- 2022년 8월부터 네덜란드는 새로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육아휴직 관련 법(Wet betaald ouderschapsverlof)은 작년 4월 하원, 그리고 10월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오는 8월 2일자로 발효된 것이다.
- 이전에는 네덜란드 부모가 무급 육아휴직 26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 유급 육아휴직의 주 골자는 육아휴직 9주를 유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번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의 주된 목적은 여성에게 집중되던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부모 양측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이다.
-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26주(본인의 주당 근무시간 × 26)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9주 유급, 17주 무급 휴직이다. 단, 유급휴직은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전부 연속으로 사용해도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일 단위(예: 주 2일) 또는 업무시간 단위(예: 일 3시간)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 역시 동등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일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법정 최대 임금(일 최대 232.9유로, 한화 약 32만 원)의 70%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나 소속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일부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서 일 임금 100%가 지급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 감소 내역을 통보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주택이나 의료보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나, 늦어도 2달 전까지는 고용주에게 육아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보험공단(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 UWV) 측에 신청해야 개별 산정된 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 유럽연합(EU)은 2019년 회원국들이 2022년 8월 2일까지 부모 간 돌봄노동에서의 평등,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Directive, EU/2019/1158))’을 제정한 바 있다. 본 지침은 최소 10일간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최소 병가에 준하는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 2개월은 부모 간 양도할 수 없이 각자 사용하도록 지정한 휴가이면서 회원국 결정에 따라 휴직수당 지급, 연 5일의 돌봄휴가제 도입, 유연근무제 보장하는 권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 유급 육아휴직 확대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제도적 개혁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 근로자보험공단(UWV) 공식 웹사이트의 발표에 따르면, 잉헤 코테(Inge Cotte) 이사장(executive director)은 근로자보험공단은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지난 몇 달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 질의응답 대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공단으로부터 한 번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대신 3회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 방식은 특히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재정 운영상 긍정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전에는 남성은 자녀를 출산 후 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0% 유급이다.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네덜란드 고용계약법(Wet arbeid en zorg, WAZO)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 6주, 출산 후 최소 10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출산 전 사용한 휴가 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 잔여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테아 출산인 경우, 출산휴가는 최소 20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직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출산휴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100% 유급(일 최대 219.28유로, 한화 약 30만 원)이며, 출산휴가 수당 역시 근로자보험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 노동조합연합(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FNV) 바스 판 베이흐베르흐(Bas van Weegberg) 대표는 이번에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 이행이 반가운 일이라면서,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그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여전히 이번 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일간지(NL Times) 보도에 따르면, 베이흐베르흐 대표는 “유급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70%이니, 급여의 30%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 노동조합연합 측은 100% 전액 휴직수당을 요구한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차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네덜란드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RTL 뉴스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재단(Stichting voor Werkende Ouders)’ 마르옛 빈세미우스(Marjet Winsemius) 대표는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유급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 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 100%가 아닌 70% 급여 지급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번엔 새로 이행된 육아휴직 제도는 네덜란드 부모 양쪽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전에 비해 유급 휴가 9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00% 급여 지급이 아닌 점, 사용 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이 지적된 만큼, 네덜란드 정부에게는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Dutch News (2022.8.2.) "New parents are entitled to more paid leave, but is it enough?", <https://www.dutchnews.nl/news/2022/08/new-parents-are-entitled-to-more-paid-leave-but-is-it-enough/> (접속일: 2022.9.23.).
- European Commission (2019.8.22.) "EU Work-life Balance Directive enters into forc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89&newsId=9438&furtherNews=yes> (접속일: 2022.9.23.).
- NL Times (2022.8.2.) "Netherlands parents can now take paid parental leave", <https://nltimes.nl/2022/08/02/netherlands-parents-can-now-take-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2.9.23.).
- RTL Nieuws (2022.8.2.) "Goed nieuws voor jonge ouders: vanaf vandaag recht op 9 weken betaald ouderschapsverlof", <https://www.rtlnieuws.nl/economie/artikel/5324438/betaald-ouderschapsverlof-9-weken-ouders-kinderen-baby> (접속일: 2022.9.23.).
- 네덜란드 근로자보험공단(UWW) 공식 웹사이트, "Wet betaald ouderschapsverlof vanaf vandaag van kracht", <https://www.uww.nl/overuww/pers/persberichten/2022/wet-betaald-ouderschapsverlof-vanaf-vandaag-van-kracht.aspx> (접속일: 2022.9.23.).

독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증액 예정²⁾

- 최근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Germany, BMFSFJ) 리사 파우스(Lisa Paus) 장관은 내년부터 자녀양육수당 금액과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Kindergeld) 증액, 자녀 양육 세제혜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중된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기획한 제3차 물가상승 대응 지원 조치 중 하나이다.
-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독일 내 모든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된다. 단,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지역 고용청 내 아동수당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해 최대 25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수당은 2021년에 월 15유로 인상된 바 있고, 올해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다. 아동수당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월 219유로(한화 약 31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 월 225유로(한화 약 31만 8천 원), 넷째부터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이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첫째~셋째 자녀 월 237유로(한화 약 33만 5천 원)로, 기존에

2) 광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비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수령하는 금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반면 넷째 이상의 자녀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023년 120억 유로(한화 약 160조 9,800억 원), 2024년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4,8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기독민주당(CDU) 및 독일기독사회당(CSU) 연합 측 가족정책 담당 실비아 브레헤(Silvia Breher) 대변인은 이번 제도 발표 후 다자녀가정에게는 거의 없다시피 한 혜택이나 마찬가지로 비판했다. 또한 울리케 샤프프(Ulrike Scharf) 바바리아(Bavaria) 주 가족정책 장관 역시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가 다자녀가정을 간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비판하는 측은, 아동수당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는 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계획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월 수령액이 동일하게 통일되었고, 넷째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자녀가정이 수령하는 아동수당 금액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앞서 언급한 아동수당 금액만 수령하는가? 독일이 보편적 아동수당 이외에는 어떤 자녀 양육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보너스수당(Kinderzuschlag)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급여 제도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 세전 월 900유로(한화 약 127만 원), 한부모가정 월 600유로(한화 약 85만 원)이라는 최저소득 기준 이하일 때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 해당 가정은 연방취업청(Federal Employment Agency) 가족수당 관할부서에 지원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아동보너스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아동보너스수당은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미혼인 경우)까지 지급된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아동보너스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 자녀 연령 등 개별 기준에 따라 상이한 편이나, 자녀 1인당 최대 209유로(한화 약 29만 6천 원)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상한선을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늘리기로 했다.
- 이 밖에도 2022년 5월,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최저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권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및 긴급 아동추가수당을 위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앞서 언급한 저소득층 대상 아동보너스수당을 자녀 1인당 20유로(한화 약 2만 8천 원) 증액했다.
- 또 다른 예는 독일 연방정부가 2022년 7월 일회성으로 실시한 아동보너스수당(Kinderbonus)이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공과금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경감시키고자 각 자녀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3천 원)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었는데, 2022년 최소 한 달 이상 일반 아동수당 수령 대상이라면 누구나 이번 아동보너스수당을 수령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아동보

너스수당이 지급된 2022년 7월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100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녀를 둔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관할당국에서 자동 처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 진행되었다.

-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구 내 자녀 양육 관련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실시해왔다. 한국과 독일의 세부 경제상황 및 환경은 상이하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일에서 최근 다각도로 추진하는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볼 만한 사례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Child allowance (Kinderzuschlag)", <https://www.arbeitsagentur.de/en/child-allowance> (접속일: 2022.10.23.).
- Bundesregierung (2022.6.30.), "Der Kinderbonus kommt im Juli",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deutsche-einheit/kinderbonus-faq-2053990> (접속일: 2022.10.23.).
- Deutscher Bundestag (n.d), "Bundestag stimmt für Kinder - zuschlag und Einmal - zahlung",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text=Der%20Bundestag%20hat%20sich%20am,\(20%2F1411\)%20befasst](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text=Der%20Bundestag%20hat%20sich%20am,(20%2F1411)%20befasst) (접속일: 2022.10.23.).
- Deutsche Handwerks Zeitung (2022.9.8.), "Kindergeld ab 2023: Wer bekommt wann, wie viel?",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kindergeld-wer-bekommt-wann-wie-viel-143143/> (접속일: 2022.10.23.).
- The Federal Government (2022.9.14.), "Inflation compensation for 48 million peop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inflation-compensation-act-2126292> (접속일: 2022.10.23.).
- The Local (2022.9.7.), "Germany to raise child benefits for families with up to three children", <https://www.thelocal.de/20220907/germany-to-raise-child-benefits-for-families-with-up-to-three-children/> (접속일: 2022.10.23.).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1)³⁾

-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수십 년 간 해결되지 않은 성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에 “영국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유병률과 장애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산이나 완경과 같이,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건강결과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며, 중요한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여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직접적인 건강의 불평등 이외에도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까지 해소하고자 영국은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본문에서는 해당 전략의 배경,

3)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중점사안, 그리고 협력계획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도입 배경과 절차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국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남성이 기본값(male as default)'이 된 실태에 대해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와 임상시험, 보건의료전문가 교육 및 실습,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 서비스 설계는 전부 남성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성은 배제되어 왔다. 여성들이 보건의료정책과 연구에서 배제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여성건강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해당 전략은 피임과 월경 그리고 조산과 환경까지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건강행동과 결과를 포함한다. 따라서, 생애주기적 접근법이 해당 전략에서 핵심이다.
 - 영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여성들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여성건강전략을 세우기 위해 2021년 3월 8일 전국을 대상으로 '의견 공모(call for evidence)'를 2주간 진행하였다. 공모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16세 이상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Women's Health - Let's talk about it)' 공공설문조사이다. 두 번째는 여성건강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연구보고서나 논문과 같은 서면으로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세 번째는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이 왕립재단(King's Fund)과 협력하여 영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Study)이다. 이 중 특히 서면 제출 분야에서는 2주간 10만 명 이상의 개인 응답과 400개 이상의 전문가 및 기관의 자료가 접수되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6가지 중점사안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은 10년간의 변혁을 계획한 바, 장기적으로 여성건강증진과 불평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중점사안을 6가지 정했다.
 1.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금기와 낙인을 해결하고, 여성들의 요구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보건과 복지체계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2.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건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궁내막증과 같이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또한, 치매나 자폐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여성을 기본값으로 두고, 건강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명백히 할 것
 3. 개인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인식할 것: 여성의 나이, 인종, 성적지향, 장애, 출신지가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더 나은 정보와 교육: 여성들이 여성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 여성의 건강상태가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것: 월경이나 환경과 같이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직장에서 생산적일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주고, 관리자들이 좋은 사례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연구지원을 확장하여 근거에 기반한 좋은 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장려할 것: 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연구대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격차를 좁히고, 현존하는 데이터가 성별로 분리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은 몇 가지 주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월경과 부인과 건강, 임신과 유산, 환경, 정신건강, 암, 여성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노화, 만성질환이 그 예시이다.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협력계획

- 본 전략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영국보건교육원(Health Education England), 그리고 왕립의대와 같은 외부기관과 산업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와도 협력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본 전략은 지역단체들 그리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들과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2)

-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성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에 “영국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정부가 집중하기로 한 사안 중 일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여성건강에 대한 정보와 인식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여성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성건강전략안(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된 수요조사(이하, 여성건강전략 수요조사)에서 여성건강관련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조사와 공공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에게서 여성건강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가 무려 74%이며, 그 다음으로 구글(Google)이 71%, 기타 서치엔진이나 블로그가 69%로 많았다. 보건 의료전문가 또는 주치의가 59%,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54%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의존도가 낮았다. 여러 기관에서 모집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금기(taboo)가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으로 여성과 여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여성건강관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향후 10년간의 적용방침은 크게 디지털 역량강화와 교육으로 나뉜다. 공공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여성건강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응답자가 적다. 따라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디지털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쉽고 간편하게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여성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깨기 위해 영국정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관계, 성관계, 그리고 보건 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 RSHE)”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교육은 남녀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제공하여, 여성건강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는 환경과 이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2024년에 발행될 예정인 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여성건강 관련 내용을 교육할 때 자신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보충자료에 성폭력, 불법촬영과 배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건강과 성재생산정의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

■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여성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깨기 위해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신체와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중요한 주제이다. 앞서 진행된 대중설문조사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주제 중에서 8위(30%)를 기록했다. 16~29세 연령집단과 다민족집단 응답자들에게는 해당 주제가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설문 참여자의 9%만 성폭력/희롱 연계센터나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센터와 같은 폭력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성

애자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 집단을 세분화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영국정부는 여성과 여아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건의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영국정부는 무관용(zero-tolerance) 법칙을 자국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관련 정책에 반영한다. 정책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중독물질 오남용으로 따른 폭력, 그리고 양육자 갈등으로 세분화된다.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해당 전략은 건강과 폭력관련 기관들이 모인 집중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을 통해 잠재적 폭력 가해자를 색출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정/성폭력이 여성과 여아들의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폭력 피해자에 집중한 보건의로 전문가 팀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Practice)의 정의를 확립 및 실현하여, 보건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과 여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의로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당 전략을 통해 공표하였다.
- 중독물질 오남용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내무부(Home Office)차원에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을 통해 중독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 예방책에 개입하였다. 이는 영국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알코올 의존증 양육자의 자녀들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men and Pensions)에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약물 오남용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인식하여 이를 해체하고,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자의 갈등이 자녀 또는 양육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전략은 갈등 기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룬다. 부모나 양육자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세대에 걸쳐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기반 폭력부터 다루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전략을 계획한 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proprietors, head teachers, principals, senior leadership teams, teacher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90195/Relationships_Education_RSE_and_Health_Education.pdf (접속일: 2022.11.22.).
- GOV.UK (2022.08.30.) "Policy Paper: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ministerial-foreword> (접속일: 2022.10.20.).
- Home Office (2021.07)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3934/Tackling_Violence_Against_Women_and_Girls_Strategy_-_July_2021.pdf (접속일: 2022.11.22.) K

- ate Womersly, Carina Hockham & Edward Mullins (2022.08.19.) "The Women's Health Strategy: ambitions need action and accountability" <https://doi.org/10.1136/bmj.o2059> (접속일: 2022.10.24.).
- Public Health England (2018.06.) "A consensus statement: Reproductive health is a public issu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1890/A_consensus_statement_reproductive_health_is_a_public_health_issue.pdf (접속일: 2022.11.20.).
- The Guardian (2022.07.20) "New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aims to end decades of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2/jul/20/womens-health-strategy-england-published-government-inequality> (접속일: 2022.10.20.).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총리 정부 출범과 여성정책 전망⁴⁾

- 2022년 10월, 이탈리아에서는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극우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다.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무솔리니가 취임했던 1922년 이후 10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극우정당 출신 총리가 취임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공화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여성 정치인이 진출한 가장 높은 직급은 외교부 장관, 상원의장이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총리인 만큼, 멜로니 총리는 과연 여성 및 양성평등 추진 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정치 및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멜로니 총리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 워킹맘이다. 그리고 본인이 겪은 성 고정관념, 젠더기반 온라인 협박이나 괴롭힘 등의 문제점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하지만 멜로니 총리가 오늘날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여성인권 개선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 총선 유세 기간 동안 멜로니는 본인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맞서는 강인한 여성이자 이탈리아에서 정당을 이끄는 유일한 여성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본인을 여성주의자(feminist)라고 묘사하지는 않았으며, 기업 내 의사결정직 여성할당제(pink quo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성별이 아니라 개인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그리고 멜로니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본인은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하였고, 임신중지와 성소수자(LGBTQ+) 사회운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멜로니측이 추진한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출산율 증대인데,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국민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반면, 이민자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이탈리아의 인종 구성비율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고집한다.
- 특히 멜로니가 속한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은 임신중지 서비스 접

4) 콕서히,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근성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축소해 왔다. 멜로니는 임신중지를 금지하지는 않겠으나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말고 다른 옵션도 있다는 걸 알려 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예를 들어 임신중지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여성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공립 병원에서는 무료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진이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 수술이나 약물 처방을 거부할 양심적 거부 권리가 보장된다.

- 유로뉴스(Euronews)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역별 정당 기반에 따라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성에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수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지 약 처방 및 수술을 거부해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멜로니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지자, 9월 말 이탈리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멜로니와 이탈리아의 형제들을 향해 기존의 임신중지법을 개정하지 말 것, 그리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한 이탈리아 기자는 영국 온라인 매체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와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정치철학자는 멜로니 총리는 대체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발언해 왔고, 백인, 이탈리아 자국민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멜로니 총리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본래 엄마가 되는 것이 순리라고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멜로니가 앞으로 여성은 재생산, 육아 부분을 맡는다는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 멜로니의 정책 공약 노선을 토대로 미루어보건대 새 내각이 여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중도진보 성향의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인 한 의원은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부 하에 이탈리아 여성 인권은 일보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성 유명인사들도 멜로니 총리의 가족계획 정책, '전통적인' 가족 관념을 중시하는 태도, 소수인종 여성의 권리 무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여성 가수는 멜로니의 공약은 이성애자이면서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성을 강조하고, 성 소수자 및 소수인종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한 유명가수 역시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멜로니 총리 측이 내세운 공약들은 전횡적인 기존 가족의 이미지와 성 정체성을 고수하는 정책 공약들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여성 관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일 년여 간 여성 대상 살해(femicide) 사건은 125건에 이르렀으며, 수치를 환산하면 3일에 한 명 이상 꼴로 살해당한 셈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자국민이었는데, 멜로니가 속한 정당은 외국인이 저지른 여성대상 살해 사건들만 공론화시키고 주의를 끄는 데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2022년 10월 22일 출범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여성 총리가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지, 여성 관련 사회 현안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AP News (2022.9.28.) "Italians march for abortion rights after Meloni victory",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elections-marriage-italy-808172ad84f4f3d35feef3645633bd06> (접속일: 2022.11.23.).
- Euronews (2022.9.28.) "Italy election: Activists raise alarm over abortion rights after Meloni's win", <https://www.euronews.com/2022/09/27/italian-activists-raise-alarm-over-abortion-rights-after-melonis-win> (접속일: 2022.11.23.).
- Open Democracy (2022.9.26.) "The anti-women agenda of the woman set to be the next Italian prime minister",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giorgia-meloni-far-right-brothers-of-italy-election-prime-minister-racism-gender/> (접속일: 2022.11.23.).
- Politico (2022.9.2.) "Will Italy'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be bad for women?", <https://www.politico.eu/article/italy-first-woman-prime-minister-giorgia-meloni-mario-draghi-brothers-abortion-feminist-levante-chiara-ferragni-elodie/> (접속일: 2022.11.23.).
- The Guardian (2022.9.29.) "Italy's Giorgia Meloni denies she is anti-women as credentials questioned",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sep/29/giorgia-meloni-italian-women-abortion-pink-quotas> (접속일: 2022.11.23.).

미국 임신중절 금지 이후,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s)⁵⁾

- 미국 대법원이 2022년 6월 24일 1973년의 로(Roe) 판결을 뒤집고, 임신중절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 법을 따라 결정하게 한 이후, 주마다 그 판결에 따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 법(Safe Haven laws)”이다.
-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은 1999년 텍사스의 아기 모세법(Baby Moses Laws)을 시작으로 아기의 엄마가 위기의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포기/양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괌(Guam), 그리고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실행되고 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은 아주 어린 영아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Arizona), 아칸소(Arkansas), 코네티컷(Connecticut), 조지아(Georgia)를 포함한 7개주와 괌(Guam), 그리고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는, 태어난 지 72시간 이전의 영아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23개의 주에서는 태어난 지 30일 이전의 영아만 양도가 가능하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 영아의 양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무 곳이나 영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 병원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이 법이 지정한 장소에만 영아를 양도할 수 있다. 영아의 양도 장소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영아를 받아들

5)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일 의무가 있다. 미국의 5개 주(애리조나, 켄터키, 뉴햄프셔, 등등) 및 푸에르토리코는 교회에도 영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영아를 양도하는 부모의 경우 양도 당시 교회 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영아의 양도를 맡은 기관에 대해, 대부분의 주에서 양도 후 영아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면해주며 35개의 주에서는 형사책임에서도 면제가 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 미국 내에서도 엄격한 임신중절을 실행하고 있는 텍사스의 경우에도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임신중절 금지법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지 못한 여성들의 대안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텍사스는 태어난 지 60일 이전의 영아를 병원, 응급실, 혹은 소방서에 이유 불문 양도할 수 있다. 영아가 학대 없이 건강한 상태이면 아이를 양도한 부모는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The Texas Tribune, 2022). 최근 인디애나(Indiana)의 경우 영아를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는 베이비 박스(baby box)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NPR, 2022). 현재 인디애나주의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베이비 박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디애나주는 2016년 처음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고 현재 113개의 베이비 박스가 미국에 존재하는데 그중 86개가 인디애나에 존재한다(NPR, 2022).
- 보수당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개인의 임신중지 권리를 포기(당)한 여성들에 대해 정부가 양육의 책임을 면해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정·보호서비스부서(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의 데이터에 의하면 텍사스에서 2009년 이후 172명의 아동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한 해에는 21명의 영아의 양도만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임신중절법이 뒤집어지기 전 텍사스에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임신중절 건수는 50,000건에 달했다(The Texas Tribune, 2022). 이는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맞지 않는다. 또한 많은 여성이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The Texas Tribune, 2022).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법대 교수인 미셸 오버맨(Michelle Oberman)은 정부가 충분히 정책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NPR, 2022).
- 또 다른 문제는 법이 존재하고 베이비 박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여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 여성이 베이비 박스를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못했으나 자녀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베이비 박스보다는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고 전해진다. 물론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부모의 숫자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박스와 달리,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입양장소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고 입양 보낸 자녀와의 장기간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보다는 전통적인 입양방식이 선호된다(CNN, 2022).
- 따라서 전문가들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임신중절금지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든 혹은 전통적인 입양 방식을 통해서든,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 않고, 또한 자녀의 양육권의 책임뿐 아니라 ‘임신’

자체가 여성들의 생활, 직장 등에 미치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CNN, 2022). 현재 더 많은 주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및 태어날 아이에 대한 보호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Infant safe haven law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Famili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utes/safehaven/> 접속일: 2022.9.24.).
- The Texas Tribune (2022.6.26.) "Texas has a law that allows parents to give up newborns at fire stations or hospitals. Hardly anyone uses it." <https://www.texastribune.org/2022/06/26/texas-safe-haven-law/> (접속일: 2022.9.24.).
- NPR(2022.8.3.) "Indiana is installing more baby boxes, where newborns can be anonymously surrendered" <https://www.npr.org/2022/08/03/1115456040/indiana-is-installing-more-baby-boxes-where-newborns-can-be-anonymously-surrendered> (접속일: 2022.9.24.).
- CNN (2022.8.9) Conservatives have pushed infant safe haven laws as an alternative to abortion. But few American women use them. <https://www.cnn.com/2022/08/09/us/infant-safe-haven-law-abortion-invs/index.html> (접속일: 2022.9.25.).

미국, 여성 수감자의 의료보호⁶⁾

- 미국의 대량 수감(mass incarceration) 현상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주와 연방 감옥, 그리고 지역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2). 지난 40년 동안 수감자의 수가 500% 증가하였고 미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미국은 100,000명당 639명이 감옥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100,000명당 562 명이 수감되어 있는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100,000명당 330 명이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다(statistics, 2022). 대부분의 수감자는 남성이지만 여성 수감자의 수도 적지 않다. 모든 수감자의 10% 정도가 여성 수감자이고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여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는 남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보다 훨씬 빠르다.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곧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수감자는 약물 사범이거나 혹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80%의 여성 수감자가 자녀를 둔 “엄마”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약 3~4%의 여성 수감자가 수감 당시 임신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2).
- 약 3~4% 정도의 여성이 수감될 당시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대부분이 감옥 및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임산부 건강보호 정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교도소가 헌법에 의해 출산 전의 건강보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주의 교정 시스템(감옥 및 교도소와 같은)의 임산부 케어를

6)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위한 프로토콜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수감된 여성들에게 출산 전 의료적 케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중 12개의 주에는 수감된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사법통계청의 2004년 설문에 의하면 54%의 임신부만이 감옥에서 출산 전 의료 케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된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건강한 출산을 방해할 위험요소(예: 약물 중독, 성병)가 더 많이 존재하고 그 위험요소가 수감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개의 주에서는 “고위험군” 임신부에 대한 특별 케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19). 이를 반영하듯 수감된 여성들의 유산율은 19~22% 정도로 일반 여성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또한 조산율도 일반 여성들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이는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기본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렇다면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 옹호 및 연구 프로그램”(the 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의 디렉터인 캐롤린 서프린(Carolyn Sufrin)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12개월 동안 22개 주의 감옥과 6개의 지방정부 교도소를 확인한 결과 19개 주만이 수감되어 있는 임신부의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며 그중 3분의 2는 임신중절 비용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 제도가 그녀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지 예측가능하다.
- 하지만 이제 로 대 웨이드(Roe v. Wade)가 뒤집히고 각각의 주(States)마다 임신중절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여성 수감자에게 임신중절을 허용했던 주에서도 수감된 여성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에게도 해당하지만, 수감된 여성들의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로 이동해 임신중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주가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그 주의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도 금지되었다(Young, 2022). 이에 따라 앞으로 교도시설에 거주하는 임신부 여성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관리는 빈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며 이는 그녀들 및 그 자녀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옥 및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임신부를 위한 건강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도 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19.12.5.) "Prisons neglect pregnant women in their healthcare policies".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19/12/05/pregnancy/>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1.8.19.) "Unsupportive environments and limited policies: Pregnancy, postpartum, and birth during incarceration"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21/08/19/pregnancy_studies/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2.3.14.)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22."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2.html> (접속일: 2022.10.27).
- Prison Police Initiatives (2022.5.4.) "Prisons and jails will separate millions of mothers from their children in 2022."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22/05/04/mothers_day/ (접속일: 2022.11.2).
- Statista (2022.8.5.) "Incarceration rates in selected countr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2962/countries-with-the-most-prisoners-per-100-000-inhabitants/> (접속일: 2022.10.27).
- Young, M. (2022.10.21.) "Abortion bans create 'insurmountable barriers' for incarcerated women in U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oct/21/us-abortion-bans-insurmountable-barriers-incarcerated-women>. (접속일: 2022.11.2).

일본에서의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과 임신중절시의 배우자 동의 조건에 관해서⁷⁾

- 미국에서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히는 결정이 6월에 나온 이후, 각국의 여성계에서 임신중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임신중절 시의 배우자 동의 조건이다. 이전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는 해당 조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였으나, 최근 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른 '낙태죄(墮胎罪)'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에 의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하여 이 경우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모체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인공 임신중절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후 '임신중절'로 표기)이 가능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조건 1: 임신 22주 미만(임신 21주 6일까지)의 임신일 것⁸⁾
 - 조건 2: 모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의사(일본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공익사 단법인 의사회가 지정한 의사를 지칭)'가 임신중절을 시행할 것
 - 조건 3: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조건 4: 이하 중 하나의 해당하는 이유를 가질 것

7)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8) 모체보호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의 기준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개정되어 왔는데, 1990년의 후생성의 통지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기를 통상 임신 22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의 판정에 있어서는 담당 지정 의사의 재량권이 강조된다. 公益社団法人 日本産婦人科医会 "人工妊娠中絶の定義" <https://www.jaog.or.jp/sep2012/JAPANESE/teigen/teigi.htm>

1.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강간에 의한 임신

- 위와 같이 일본에서는 신체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엄격히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태아가 다운증후군 등의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검사를 통하여 판명된 경우 등)에도 그러한 요인의 경제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 위의 임신중절의 조건에서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에 관한 조건이다. 모체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한편으로는 남성의 중절 거부권과 출산 강제권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신은 여성의 신체와 사회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선택권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출산을 강요받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 일본 내에서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편, 모체보호법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의 사례 규정을 두어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때나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미혼일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2013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좋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2021년)(読売新聞, 2022.2.20.).
- 그러나 모체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인해 의사가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며, 남편의 동의 없이 수술한 병원 측이 남편에게 배상을 한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병원을 소개하기도 한다.
- 실제로 NHK가 올해 8월 보도한 일본 전국 지정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는 미혼자의 임신중절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에서 “상황에 따라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을 한 지정의사는 62%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대로, 같은 조사에서 미혼일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NHK, 2022.8.18.).
- 해당 조사에서 미혼자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로는 ‘모체보호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71%)’, ‘소송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43%)’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모체보호법의 배우자 동의 규정 원칙이 의사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은 배우자 동의 조건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임신중절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임신부들은 임신중절의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한 상태에 놓이고, 한 번 상담을 진행하였더라도 해당 병원이 거절할 경우 새로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임신중절이 지체되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점차 일본 여론에서 해당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점은 올 해 5월 경구중절약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견해를 둘러싼 일본 사회 내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구 임신중절약의 투약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5월 17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모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일본의 SNS 상에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일에 왜 배우자의 허가가 필요한가” 등의 다수의 비판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모체보호법의 해당 조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인용되기도 했다.
-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22년 6월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일본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조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연구자와 조산사 등이 만든 “더 안전한 중절을 액션(もっと安全な中絶をアクション)”은 6월 27일 후생노동성에 약 8만 2천명의 서명을 전달해 인공임신중절 시 배우자 동의 조건의 폐지를 요청했다. 해당 단체는 “안전한 임신중절은 여성의 권리이나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강조했다(朝日新聞, 2022.6.28.). 또한, NHK는 “클로즈업 현대(クローズアップ現代)”라는 방송에서 임신중절을 주제로 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였으며(9월 7일), 이때에 배우자 동의 조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한편 의사들도 해당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작년 11월 오카야마현 의사회의 모체보호법 지정 의사를 상대로 요미우리신문이 진행한 조사에서 조사응답자의 66%(44명)이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자유기술 항목으로부터 “배우자란에 서명이 없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심”이며, “법적으로 의사의 입지가 약하다”라는 등의 의견 등이 확인되었다(読売新聞, 2022.2.20.). 또한, 올해 8월에는 일본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폭력이나 성범죄에 연루되어 임신한 경우나 사실혼이 아닌 미혼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를 구해서는 안 되며 … 기본적으로 여성 본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일본산부인과의사회가 전면적으로 보조해 간다”라고 의견을 밝혔다(NHK, 2022.8.18.).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임신부들의 심적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 동의 조건을 둘러싼 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안전한 중절을 액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당들 중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NHK당이 배우자 동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6월 28일 기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과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이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의 조속한 개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모체보호법의 배우자 동의 규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폭넓은 이유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모체보호법 내의 배우자의 동의 조건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의사회가 조금씩 관대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나, 아직 일본 내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련한 담론과 정당 및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법령 “母体保護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3AC0100000156> (접속일: 2022.9.3.)
- Safe Abortion Japan Project “中絶について” <https://safeabortion.jp/induced-abortion/#inducedabortion02> (접속일: 2022.9.3.)
- 公益社団法人 日本産婦人科医会 “人工妊娠中絶の定義” <https://www.jaog.or.jp/sep2012/JAPANESE/teigen/teigi.htm> (접속일: 2022.9.3.)
- 아사히신문(2018.3.19.) “「命の選別」なのか 新型出生前診断、開始から5年” <https://www.asahi.com/articles/ASL3D5453L3DULBJ00P.html> (접속일: 2022.9.3.)
- 손여욱. (2020).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1-24.
- 東洋経済 ONLINE(2022.6.20.) “「中絶」がタブー視される日本人女性の気の毒さ” <https://toyokeizai.net/articles/-/597661?page=4> (접속일: 2022.9.3.)
- 법조신문(2022.7.20.) ““낙태 시 배우자 동의 받아야” 일본 ‘모체보호법’ 논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5> (접속일: 2022.9.3.)
- 読売新聞(2022.2.20.) “中絶「配偶者の同意」要件、産婦人科医7割「撤廃すべき」…DVや強制性交被害の例も” <https://www.yomiuri.co.jp/medical/20220219-OYT1T50381/> (접속일: 2022.9.3.)
- NHK(2022.8.18.) “人工妊娠中絶 “不要な同意求めない” 周知へ 日本産婦人科医会”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18/k10013778041000.html> (접속일: 2022.9.3.)
- 毎日新聞(2022.5.20.) “厚労省「経口中絶薬に配偶者同意が必要」に批判相次ぐ 何が問題か” <https://mainichi.jp/articles/20220520/k00/00m/040/417000c> (접속일: 2022.9.3.)
- 朝日新聞(2022.6.28.) “中絶の配偶者同意規定、廃止を「女性の自己決定権を奪っている」研究者 助産師ら、8万人署名提出”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337401.html> (접속일: 2022.9.3.)
- もっと安全な中絶をアクション(2022.6.) “2022〈参議院選〉政党アンケート 「中絶等に関する4つの質問」と政党からの回答” <https://2020-japan.webnode.jp/政党アンケート/> (접속일: 2022.9.3.)
- YAHOO JAPAN News(2022.9.6.) “【クローズアップ現代】人工妊娠中絶を特集「苦しむ女性減らすために」日本の実情、課題が浮き彫り” <https://news.yahoo.co.jp/articles/c1275a85b3df074834daf273dc79f4541302b16d> (접속일: 2022.9.2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년 예산안 편성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 4,650억 원)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 편성
 - 예산안에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확대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이 포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8.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31

여성가족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27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2021년 한부모 가구(총 151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를 차지하고, 여성 한부모 가구(75.2%)가 남성 한부모 가구(24.8%) 대비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는 19.3%p, 고용률 격차는 18.8%p로 2000년보다는 감소했으며, 2021년 규모 1천 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5%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9.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4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여성가족부,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발표
 -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 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0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
 -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6.3%이며 전년 대비 1.5%(p) 감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9.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44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00만 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 안내 예정
 -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9.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5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연차사용률과 가족 돌봄휴직, 휴가 이용을 포함한 세부 평가지표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9.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76

여성가족부,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보고

- 여성가족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예방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지고,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하고,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 추진,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 10.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86

-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 참고문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5423#none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사업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801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협력 방안 논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아니타 바티아(Anita Bhatia)와 면담하고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운영 협력 방안 논의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2022년 8월 출범한 국내 최초 유엔여성기구 산하기관으로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802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
 - 위원회는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803

여성가족부,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발표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영상을 차단,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 처벌 근거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 등 약 20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 의무화되고 기관장 등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과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0.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84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이후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육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843

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안내 돌봄지원 내용 포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851

여성가족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가족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1인 가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 토론회에서는 1인 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연령, 혼인상태, 소득수준별로 생활실태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87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실제 공개 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계획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89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운영 경험을 전수(멘토링)하게 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에게 적용할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920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919

여성가족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힘.
 -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933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
 - 이번 방안은 1인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94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95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2.09]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952

[법무부]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법무부 보도자료, 2022.09.16]

·참고문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yOTg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0Q0QIMj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YW51JTNEZmFsc2UIMjZwYWdlJTNEZmFsc2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이번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한편,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06]

• 참고문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95423#none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공부문 다양성 분석

-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됨.
 -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6%p,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관리자(부장, 팀장 등) 비율은 각각 22.5%, 27.8%로 나타남.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2.09.29]

• 참고문헌 •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478&category=&pageIdx=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관명칭 변경 추진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관명칭 변경 협조 요청
 - 나경원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2.11.25]

• 참고문헌 •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73>